긴급 토론회

조국사태 진행과정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문제점 및 현황

▶ 일 시: 2019. 9. 10(화) 오후2시

▶ 장 소: 한국프레스센타 매화홀(19층)

▶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본 토론회는 바른사회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순 서

■ 사 회

- 박 인 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발 제

- 한 정 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김 진 기 (펜앤드마이크 기자)

■ 토 론

- 박 인 환 (변호사 / 前 검사)
- 이 창 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성명서 발표

목 차

■ 발 제

조국 현상의 본질과 보수정치 세력의 한계 9
- 한 정 석 (미리한국 편집위원)

조국과 우리 사회의 좌익 특권계급: C86의 내 새끼 의대 교수 만들기?.. 13
- 김 진 기 (펜앤드마이크 기자)

■ 토 론

- **박 인 환 (변호사 / 前 검사)** 21

- **이 창 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3

■ 긴급정책토론회

발 제

■ 한 정 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김 진 기 펜앤드마이크 기자

[발제 ①]

조국 현상의 본질과 보수정치 세력의 한계

한 정 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들어가며

0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진 극심한 여야 대립과 국론 분열은 현 통치세력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통치 정당성과 이에 길항하는 야권세력의 현 주소가 어디쯤 인지 가늠케 해주는 지표였다고 볼 수 있음.

0 여기에 이번 조국 임명 사태가 불러올 파장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현 집권세력의 통치적 정당성을 관철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으로부터 우리 사회에 극심한 갈등과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으로도 예상되며 이러한 갈등 상황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대한민국이 처한 내우외환적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도 사료됨.

0 이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의 본질을 돌아보고, 올바른 민주주의의 방향과 건강한 보수 시민 정치세력의 재건을 통한 길항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조국사태의 본질

0 이번 조국 사태의 본질은 여야간 정치적 대결구도에 검찰이 '데우스엑스마키나'의 방식으로 참여함으로써, 여야간 정치적 헤게모니 투쟁 성격을 넘어, 검찰과 집권세력간에 권력의 정당성 다툼으로 발전했다는 점에 있음.

0 조국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재인과 조국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친노'라는 정치적 이익집단으로부터 소환된 '정치적 토템'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0 다시말해 현재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심화된 2기라 볼 수 있으며, 이는 과거 노무현 정권의 실패로부터 학습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고로부

터 강렬한 트라우마를 가진, 그럼으로써 에릭호퍼가 명명한 '맹신자'들의 속성을 가진 적극적 정치참여 세력의 운명 공동체가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0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모든 주요 국정과제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헌정적 통치 관점에 따른다기 보다는 '범친노'라 불리는 결속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생협, 사회적기업,전교조,민주노총,민변 등등의 집단적 선호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소득주도 성장, 한미동맹, 지소미아, 남북관계 모두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합리와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눈에 문재인 정권의 국정 결정은 기이하고 불안하게 보일 수 밖에 없음.

0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전 박근혜 정권에서 대통령과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 보였던 '교주-신도' 현상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토템-숭배'현상으로 발현한다는 것임. 즉, 신도들은 교주에게 충성하고 복종하지만, 숭배자들은 토템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속을 위해 상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그 상징가치가 사라지면 언제든 내 버린다는 것임. 따라서 문재인, 조국과 같은 정치적 토템들은 자기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본원적 정치적 결정이란 존재하지 않음.

한국당과 보수정치세력의 한계

0 이러한 친노 집단세력의 결집과 추동력에 호남이 자유한국당에 가진 강력한 거부의식이 문재인 정권에 '묻지마'식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이는 과거 노무현 정권시 비판적이고 독자적 정치의식을 발현했던 호남과는 다른 모습이며 그 원인은 한국당 일부에서 무리하게 주장되던 광주 5.18부정과 폄훼, 그리고 친박 성향 의원들이 동조하는 탄핵무효론이 근본적으로 한국당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연유한다고 사료됨.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한국당에서 어떻게든 광주 5.18과 탄핵에 대한 불복 또는 수용 입장이 공식적으로라도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임.

0 즉 탄핵 이전과 이후에도 한국당은 변한 것이 없다는 일반적 국민 인식이 문재인 정권으로 하여금 조국처럼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심지어 파렴치한 범죄 혐의까지 받는 인물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해도 국민 여론이 이를 비판하는 한국당에 지지율로 공감을 표시하지 않는 이유라 할 수 있음. 그런 점에서

이번 조국 사태에서 한국당은 야당의 역할을 언론과 검찰에 넘겨 준 셈이라 할 수 있음.

0 따라서 향후 자유한국당이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한국당은 조국 임명 이후 전개될 검찰과 통치 권력간 갈등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주변화될 수 있으며, 이는 2020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에 더 큰 무기력감과 내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즉 야당 자체의 존재감이 상실되는 것임.

민주당의 탈(脫)정당성과 반민주성

0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과 일반적인 진보성향의 시민들로부터가 아니라 맹신과 트라우마, 그리고 기득권화된 친노 집단으로부터 정책적 의사결정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정책들은 현실에서 실패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민주당은 청와대의 정책적 실패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한다는 점이 남게 됨.

0 문제는 민주당 역시 '토템-숭배'라는 문재인 정권의 통치 기제의 구조적 영향 하에 있다는 것이며, 민주당 의원들 개개의 의사는 모두 이 친노 세력과 정치 관여 그룹의 집단성에 예속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따라서 이를 배신하는 민주당의원들은 곧 정치적 사망을 의미하게 됨.

0 민주당의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 정치사회에서 국민의 대의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헌정적, 자율적, 책임적 의정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이로인해 민주당 역시 건강한 민주주의 정당기구로 존재하기는 불가능하며, 지지율 하락시 억눌렸던 내부 갈등이 일거에 폭발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음.

0 문제는 청와대와 같은 대통령의 권력기구는 그 수명이 유한하지만 정당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무한성을 지향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고, 문재인 정권의 경직적이고 포퓰리즘에 예속된 정책들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건전한 비판으로 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친노 맹신그룹들에 대한 예속성은 대한민국에 상당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임.

대안의 모색

0 조국 임명으로 갈라진 국론과 제 정치세력간의 갈등을 통합하기 위해서 먼저 대안적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혁신이 그 무엇보다 우선된다고 하겠음. 이를 위해 먼저 지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된 것이 아

니라, 사실상 박근혜 당이었던 현재의 자유한국당이 함께 탄핵되었다는 정치적 의미를 수용하고, 이를 국민앞에 반성하고 수권정당으로서 '통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이 한국당에 등장해야 함.

0 검찰이 정권을 견제한다고 해도, 그것은 죽은 권력이거나 좀비화된 권력에 대한 것이고 인사권을 가진 살아있는 권력에 검찰이 대항해 성공할 수 있는 검찰이란 권력의 속성상 가능하지 않음.

0 설령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검찰이 정치적 입장에서 정의를 추구한다는 그 자체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야당의 입장에서는 결코 환영할 수 만은 없는 것임. 따라서 현재 문재인 정권의 예정된 국정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당의 혁신을 시급하게 추구하고 내적 변화를 통해 국민앞에 대안적 정치력으로 등장해야만 함.

0 이를 위해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은 탄핵에 대한 입장을 당 차원에서 정리해야 하며, 광주5.18과 같은 문제도 전향적 선언과 합리적 입법을 통해 호남의 민심이 문재인 정권의 실책에 목소리를 내도록 길을 터주어야 함.

0 결론적으로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올바른 사고를 보수 시민들과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등이 가져야 하며 이를 낭만이나 감성으로 비정치화하는 태도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의 모색을 계속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함. 그 대표적인 담론 가운데 하나가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주장되는 '죄 없는 가련한 여인의 몸으로 감옥에 계신'과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감수성들임.

[발제 ②]

조국과 우리 사회의 좌익 특권계급
: C86의 내 새끼 의대 교수 만들기?

김 진 기
펜앤드마이크 기자

첫 문장을 여러 번 쓰고 지웠다. 그만큼 조국 법무부 장관(이하 존칭생략)으로 인한 파문이 우리 사회에, 그리고 내게 던지는 메시지는 복합적이었다. 평소 386, 이젠 586인 특정 세대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던 터에 조국 一家의 민낯을 보게 되니 과연 운동권 출신의 586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특권층으로 공고히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됐다. 이번 발제는 심도있는 분석이 아니라 관전평에 가깝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1.

조국은 지난달 25일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그간의 소회를 털어놓았다. 그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조국의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안이한 아버지가 아니라 철두철미한 아버지였던데 대체 무슨 소리인가"라며 조국에게 신랄한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조국 부부는 자녀들의 '황제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국 딸 조민은 2008년 한영외고 2학년 재학 중 단국대학교 의대 연구소에서 보름 가량 인턴을 했다. 조민에게 인턴 기회를 준 보답으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는 자신의 아들을 조국의 서울대학교 법대 소속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으로 보낼 수 있었다. 한영외고 학부형들이 서로의 자녀에게 인턴 기회를 줌으로써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펙을 만들어준 것이었다. 조국 부부를 포함한 이들 학부모들은 평소 차별 폐지와 평등 교육을 부르짖으며 우파정권의 수월성 교육정책 일체를 비난해온 586세대가 대다수다.

장영표 교수는 2009년 대한병리학회 학회지 등재 논문에 조민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줬다. 조민은 학생부종합전형과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의대 인턴 경력과 논문 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각각 기재함으로써 고려대 수시 입학에 성공했다. 조민의 '황제스펙' 관련해 유사한 패턴은 계속 드러났다. 조민은 고교 3학년 때도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단기 인턴을 했다. 조

민은 공주대 연구원들과 일본에서 열린 국제학회에 참석해 영어로 발표를 했다는 이유로 논문에 제3저자로 이름 올린다.

조민이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을 구한 것이 586인 부모들끼리의 품앗이 덕분에 가능했듯 공주대 인턴도 비슷했다. 조국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의 손을 잡고 공주대로 함께 내려갔다. 면접을 본 뒤 조민에게 인턴 기회를 준 공주대 K교수는 정경심 교수와 함께 서울대 재학시절 천문학 동아리에서 활동한 인물이었다. 조국의 아내는 대학 동기에게 부탁해 딸의 '황제스펙'을 안겨준 것이다.

母情만이 다가 아니었다. '안이한 아버지'라는 조국의 고백과 다르게 볼 여지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속출했다. 조국이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해당 위원회 소속의 서울대 J교수는 조민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인턴십을 제공했다. 조민은 인턴십 직후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산하 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인턴 대표 발표자로 뽑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나마나 조국은 딸이 동아리 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할 테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조국과 J교수는 둘 다 서울대 교수에 국가인권위 산하 전문위원회 활동이라는 점 등에서 소속이 겹친다. 조국의 뜨거운 父情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천신만고 끝에 딸이 명문대학에 들어갔으면 그만할 법도 한데 조국 부부는 미국 예일대 로스쿨의 중국계 미국인 교수인 에이미 추아(Amy Chua)를 무릎 꿇릴 정도의 타이거 맘(tiger mom)이었다. 조민은 2012년 9월 어머니가 교수로 재직 중인 경북 영주시 풍기읍 소재 동양대에서 영어봉사를 해 총장상을 받았다. 앞서 2011년 7월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인턴을 했다. 조민은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입학 때 해당 경력을 모두 빠짐없이 기재했다.

2.

서울대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SNULife)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 학생들은 조국이 수업 때 자신의 딸이 '양갓집 규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같은 예스런 표현의 실제 뜻은 시험머리가 없어 '양'과 '가'를 하도 많이 맞는 딸이라는 것으로 참으로 유머러스한 표현이었다. 조국은 이런 자신의 딸이 고려대에 들어갔다며 학생들에게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만 끝냈으면 조용히 묻혔을 조국 일가의 민낯은 법무부 장관 입성을 앞두고 만천하에 드러났다. 앞서 열거한 조국 딸의 스펙은 거의 모두가 허위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조국 부부는 불법은 없었고, 당시 관행이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아들을 자사고에 보낸 뒤 자사고 폐지에 힘을 실어준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조국을 비호하며 "높으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린 입시전형"이라 말했다. 여론 악화와

함께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추후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추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조국 문제가 우리에게 명징하게 보여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조국 파동은 한국사회가 계급고착화의 길로 들어섰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1960년대 2차 베이비붐 세대로 대학까지 졸업한 20~30%가 오늘날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세력이다. 소득분위 상위 10%를 점하는 이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386이라 불리며 정재계와 언론계, 그리고 지식시장에 진입했다. 이들은 사회구조를 본인들의 생애주기에 맞춰 비틀고 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신규세력의 진입을 막는 경직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부터 연금제도 등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제도 개혁을 막는 기득권 守舊 세력 586이 '백세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의사, 법조인, 교수 등을 포함한 586 전문직들은 586 정규직 중산층들과 더불어 자녀교육 문제에 있어 계급유지 목표를 철저히 앞세웠다. 586에 대한 비판이 세대론이자 계급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국 파동을 통해 특권계급이 돼버린 586들의 계급 대물림 방식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국과 같은 운동권 출신의 586 좌익세력들은 위선성이 극에 달했다는 점에서 C86으로 불리고 있다.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 영어몰입교육 반대, 수시 확대를 외친 이들이 누구보다 자본과 인맥을 투입해 이들 제도를 약삭빠르게 활용했다. 조국 부부는 범죄 혐의자 신세로 전락할 만큼 허위와 위조로 자녀들의 스펙을 만들어줬다. 국가고시 폐지를 주장하며 로스쿨과 의전원 설립을 관철시킨 조국 같은 이들은 자녀를 로스쿨, 의전원에 진학시켰다.

3.

반면 중산층 이하 계급 자녀들의 기초학력 미달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은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특목고를 반대했으면서 아들 둘 모두를 특목고에 보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몇년 새 서울시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증가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자 기존 방침을 뒤바꿔 시험을 더욱 많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전후로 親전교조인 좌파 교육감들이 선거에서 약진하며 각종 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교과과정을 느슨하게 만들더니 이제 와서 급브레이크를 거는 모양새다.

일설에 의하면 아이들의 미래 학습능력은 초등학생 때 상당부분 결정된다고 한다. 학습능력이 낮은 초등학생은 향후 독해능력 부족으로 모든 과목에서 하위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발표자는 중고등학생들을 과외 지도하며 여러번 놀랐다. 어떤 학생은 '行商'이란 말의 뜻을 몰라 소설 속 주인공의 가정형편을 파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문제를 틀렸다. 또 다른 학생은 비문학 독서 지

문을 풀다가 '通貨量'이 뭐냐고 묻기도 했다. 영어도 못하는데 우리말도 영어 수준으로 못하는 학생이 크게 늘었다고 체감한다. 반면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민주당에 배포한 55쪽 대응 문건은 조민이 어릴 적 미국을 다녀온 덕에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잘했기에 수많은 인턴 기회를 얻고, 논문 저자로 등재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586 좌파세력이 反美이면서도 자녀들을 미국 유학, 또는 어학연수 보내는 이유를 보여준다.

학교 교육이 부실하면 최대의 피해자는 먹고살기 힘든 가정이다. 나처럼 서울 변두리, 혹은 지방에서 자란 사람들은 정보력 및 자본력에 있어 1980년대 대학을 나온 586 중산층과 비교도 안 되는 학력과 지위의 부모 밑에서 자랐다. 동네 보습학원 한군데 다니는 게 고작이었다. 정시 비중을 줄이고 수시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 586은 최소한의 공정과 형평이 담보되리라 기대했던 입시제도를 점차 586 상류층 및 중산층에 편리하도록 다변화시켰다. 아울러 이들이 내세우는 공교육제도는 '서민을 서민답게' 만드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行商'이란 말의 뜻을 모르는 아이가 뒤늦게 수험생이 돼 안간힘쓰는걸 보노라면 격차가 어디서부터 벌어지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이 아이가 공교육에서 영어몰입교육을 받을 순 없는 것일까. 조국을 위시로 한 586 좌파진보세력들이 이를 반대하고 영어교사들의 실력을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 도입도 반대한다는데 가능하겠는가.

처음 나는 조국 부부가 왜 그토록 딸을 의대에 보내려 했는지 궁금했다. 좋은 집안, 훌륭한 외모, 우수한 학력 등을 거의 다 갖췄는데도 왜 의대로 보내 고생길을 자초하도록 했을까. 조민과 똑같이 고려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전원을 나와 의사가 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아들은 정신과 의사였다가 서울 모처 피부과에서 시급을 받는 의사로 일하는 등 고생을 한다는데 조민은 별 다를 게 있을까 싶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학업을 못 따라가 내리 유급을 한 조민이 졸업 후 시장에서 살아남으리라 보긴 어렵다. 확신컨대 나는 조국 부부가 딸은 의대 교수, 아들은 로스쿨 교수로 만들려 했으리라 생각한다. 조국 아들은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한 뒤 귀국해 로스쿨 입학시험을 봤다고 한다. 부모의 원대한 비전과 달리 조국 아들은 비록 로스쿨 입학시험에서 떨어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으로 진학했지만 조국 부부의 네트워크는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 항상 작동할 것이다.

4.

조국은 1980년대 서울 명문대학을 졸업한 뒤 학계, 언론계, 정재계, 교육계 등에 진입해 重役이 된 586들의 전성시대가 보여주는 민낯이다. 내 새끼는 최고의 교육, 최고의 집단에 속해야 하지만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게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공통적 시각이다. 내가 강남 살아보니 모두가 강남 살

필요는 없더라는 장하성 前정책실장은 솔직했다. 조국도 지난 2012년 3월 2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우리들은 ‘개천에서 용 났다’ 류의 일화를 좋아한다”며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데 힘을 쏟자”고 말했다. 이에 좌파성향 언론조차 조 내정자의 발언이 위선에 가까우며 보다 나아지고자 하는 하위계층 젊은이들의 입장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당신부터 먼저 따뜻한 개천에 내려오시든가”라는 일갈도 있었다. 지난달 18일 조국이 “국민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하자, 서울대 학생들은 “가재,붕어,개구리,미꾸라지 같은 새끼들이 감히 하늘에 사는 용인 나에게 딴지를 거네. 하지만 너네도 한 표 행사할 권리를 가지니 ‘인정’이라는 단어를 써주겠다”라며 조국을 비꼬았다.

조국과 586은 이미 우리 사회의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 소련 공산당 특권계급)가 됐다. 앞으로 없을 고도성장기에 대학 진학과 민주화 투쟁을 쟁취하고, IMF를 맞아 30대 후반부터 선배 세대의 빈자리까지 독식하게 된 세대. 이후 세대교체를 거부하며 지대추구에 올인한 세대. 모든 종류의 자본을 총동원해 공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세대. 이렇게 도달하게 된 자신들의 계급을 1990년대에 출생한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이전해주려는 욕구. 이 모두가 조국 일가를 통해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스탈린에 의해 1930년대에 발탁된 뒤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자녀들에게 지위를 물려주며 계급유지를 공고히 했던 노멘클라투라들은 앞에선 미국 자본주의를 비난하며 사회주의를 옹호했지만 뒤에선 자본주의의 산물을 향유했던 이중성으로 유명하다. 나이가 들어도 물러나지 않았던 소련의 노멘클라투라들처럼 조국과 586은 자본주의 사회의 부르주아지면서도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며 물러나길 거부하고, 걸핏하면 입에서 ‘개혁’, ‘역사’, ‘진보’ 등을 들먹인다. 하지만 우울하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역시 586 운동권에 맞설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586 운동권이 만든 지식시장에서 성장한 2030들이 조국을 통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한국 산업화시대가 낳은 괴물을 똑똑히 목도하게 됐다는 것이다.

■ 긴급정책토론회

토 론

■ 박 인 환 변호사 / 前 검사
■ 이 창 위 서울시립대 교수

[토론 ①]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曺國)의 정체성

박 인 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변호사 (前 검사)

1. **법무장관** : 헌법 및 법의 이념, 법체제, 법질서의 수호 책무
   * 황교안 장관의 통진당 위원정당해산청구, 국가보안법 등의 주무부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본질서 :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자유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2. **석사학위 논문(1989년 출판)**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 1917-1938'
   * 주제어 :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법론, 전시공산주의, 신경제정책

   <편역서> 민족해방운동 : 테제, 노선, 역사, 사례(레닌 외 저)

3.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기관지 '우리사상' 1(창간호), 2호에 기고

0 류선종이라는 가명 사용(사과원 사무처장, 강령연구실장으로 핵심이론가)

0 'PDR론(민중민주주의혁명론)-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 : 레닌의 혁명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의 정당화 및 선동
0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
: 남한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의 행동목표와 지침인 강령 작성의 필요성과 강령의 내용 제시(사적 소유와 계급 철폐를 통한 사회주의혁명 목표)

4. **사노맹 사건 연루**

: 1989년부터 활동, 무장봉기를 통한 대한민국 체제전복의 레닌식 사회주의 혁명 추구, 대한민국의 체제 부정(국가보안법위반-백태웅, 박노해 등 300여

명 기소)

5. 인사청문회 등 조국의 언행

0 조국은 사노맹 사건 연루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힘
0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밝혔으나 전향 거부(낙인 효과)

0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임을 주장(양립할 수 없는 모순관계)
: 법학자로서 '무식하거나 국민을 속이는 사기적 행태'(다중인격, 이중인격)

* 조로남불 : 자신의 이익에 대하여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적 행태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사회주의적 공유 주장
* 조럴 해저드(모럴, 오럴 해저드),
조스트라다무스, 조터스텔라(과거의 조국과 현재의 조국)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 **전대협 대자보** :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섭렵한 융복합인재(사노맹, 사모펀드)

0 2018년 개헌정국에서 개헌안 주도 :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제출, 브리핑,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 등

6.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적임자?

0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
0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지방경찰제
0 나찌의 게슈타포, 공산당의 인민위원회

7.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 과정 :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혁명의 완결

8. 검찰과의 갈등

: 패스트 트랙 관련 폭력, 의사진행방해로 자유한국당 의원 59명 경찰수사 중
(조사 없이 불구속기소 가능성?)

*** "The rest is silence", "The rest is resistance"**

조국사태 진행과정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문제점 및 현황 토론

이 창 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현 정부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배경, 경과 및 향후의 전망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함. 일방적인 비난이나 희망적 관측보다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올바른 대책의 수립이 가능함. 그런 의미에서 두 발제자의 문제 제기는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검찰은 청문회 직후에 조국의 부인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조국과 그의 가족이 연루된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청와대에 보여줌. 조국의 가족이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는 여러 가지이지만, 일단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검찰은 피의자 소환이라는 일반적인 기소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소하는 강수를 둠.

3. 검찰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직후에 그의 배우자를 기소함으로써 청와대에 피의자의 배우자를 임명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신호를 발신한 셈인데, 이는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 반발하겠다는 수뇌부의 의도를 여과 없이 보여준 것임. 검찰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음.

4. 청와대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굳건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명분으로 조국 임명이라는 악수를 두었는데, 그 이면에는 과거처럼 검찰개혁의 실패가 되풀이되면 정권의 레임덕화를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5. 청와대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 동의하는 지지층이 조국의 임명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임. 현 정부는 처음에는 반발이 있을지라도 여론의 추이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조국의 임명은 오히려 현 정부의 레임덕화를 앞당기는 자충수가 될 확률이 높음.

6. 우선 야당과 보수진영의 맹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여론이 정부와 여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향후 정국은 야당의 주도로 전개될 것임. 다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여론의 지지가 여당과 야당에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정부는 검찰개혁을 핑계로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할 수 있음.

7. 현 정부는 전가의 보도인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북핵 문제의 해결 이벤트를 동원하여 총선에 대비할 수 있음. 선심성 복지정책도 더욱 남발할 것임.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이런 시도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음. 조국 사태로 불거진 부당한 입시 행태에 분노하는 젊은 층과 서민층의 반발은 조국의 장관 임명으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임. 더구나 거듭되는 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 파탄으로 여당은 중립적인 계층의 지지도 얻지 못할 것임.

8. 야당은 무기력증과 분열을 버리고 이번 사태를 단합과 역전의 기회로 삼아야 함. 반 이상의 국민들이 조국 사태로 현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의연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올바른 정책 판단을 내려야 함. 야당은 경제, 외교, 안보, 에너지 정책에서 거듭되는 현 정부의 실패와 패착을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함.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당의 국정실패에만 편승해서는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담보할 수 없을 것임. 분열된 보수진영의 단합은 반드시 필요함.

<MEMO>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6, 고려아카데미텔
Tel : 02-741-7660~2
http://www.cubs.or.kr